

# 한국 70년 성장사의 반성과 어두운 미래전망

## 정체성 확립과 지도력 생산의 실패

박상섭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

지난 몇 달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고 결국에는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마감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중심제의 한계를 지적할 수도 있고 그 사건 속에서 드러나는 정경유착의 현실을 통해 한국사회의 심각한 부패구조의 문제도 언급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그 모두는 한국 현대 정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하나도 중요치 않은 것은 없겠으나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 보수층의 정치적 실패, 궁극적으로는 한국 정치체계 전반이 국가를 이끌어 나갈 효과적 지도력의 생산과 양성에 실패했다는 정치적 무능의 문제이다.

왜 이 문제에 주목하는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가장 선명히 드러난 점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과 그를 둘러싼 측근 보좌세력의 심각한 정치적 무능이었다. 이러한 대통령을 보수층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과 이익을 대변할 최적의 대표자로 뽑았다는 점에서, 나아가서는 그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발견된다.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의 몇 가지 중요한 약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긍정적 요인으로 여겨졌는지는 몰라도 아직 독재자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 후보를 지지할 것을 주저했다. 일부는 여성 지도자로서 그가 드러낼지도 모를 한계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의 여왕’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그는 몇 번의 선거를 통해 보수층의 표를 결집시키는 특출한 능력을 발휘했었다. 이 능력 때문에 보수층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그녀의 능력에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후보 시절부터 그녀의 부정적 특성으로 제한된 소통능력의 문제가 언급되었고 이 점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아마도 독신의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롯한 불가피한 한계점일 수 있다는 동정적인 비판도 야기되었지만 대통령직이 본격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소통 부재는 여성 대통령이라는 점과는 별로 무관하고 그보다는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 또는 능력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이 점은 이번의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상당히 사실에 가깝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여지없이 드러난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분노하고 있다. 야당과 그 지지자들도 당연히 분노하고 있으나 박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의 분노와는 성격이 다르다. 야당의 분노는 그 밑에 감춰져 있는 승리의 기대감 때문인지 그 진정성이 덜 느껴진다. 선거뿐 아니라 스포츠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경기에서 승리의 요인으로는 아군의 능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대방 적수의 무능과 실패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야당 인사들은 박 대통령의 실패를 슬퍼해야 할 이

유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선출을 직접 도왔던 보수층의 경우 속았다는 점에 대한 분노도 있겠지만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좌절감이 아마도 그보다 훨씬 큰 것처럼 여겨진다.

## 지도력이 절실히 필요한 현재의 상황

한국의 보수층의 입장에서 유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보수정권이 계속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겠지만 실제 유능한 지도력의 문제는 보수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하는 당파성을 넘어 국민 전체의 운명을 가를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현재 세계가 처한 위기상태를 관찰해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운명은 마치 풍랑 속의 일엽편주(一葉片舟)의 처지와 같아 보인다.

거의 모든 면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 기존의 미국 중심 세계질서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의 공격적 정책, 단일 유럽질서의 붕괴, 전통적 세계질서의 교란 요인으로서 이슬람권의 새로운 정치적 주장 등 모두가 세계정치 기본 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핵보유국의 지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북한의 새로운 공격적 외교는 동북아시아 질서의 근본적 재편을 재촉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거의 신화 같은 성장과 발전을 성취하였다. 이 성취를 바탕으로 우리는 거의 자만에 가까운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성취감에 취해 있었다. 마치 세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착각도 가질 정도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국제적 변화들은 그 성취를 즐길 잠시의 머뭇거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70년간의 성취는 또 다른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지 못하면 좌절감의 크기만 키운다는 점에서 차라리 없었던 것만도 못한 것이 될 수 있다.

앞으로의 국가적/국민적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발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할 유능한 지도력의 발휘에 달린 일이다. 이러한 지도력의

작업은 일시적으로는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기적 요구들을 거부하는, 즉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을 수반해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민주성’을 강조하는 잠재적 지도자들의 다양한 주장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국가의 국제적 능력 신장을 고려하지 않는 대중영합성 정책들로 채워져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국정농단 사태는 이러한 책임 있는 지도자 부족의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불안을 엄청나게 증폭시키고 있다. 막 언급했듯이 지난 70년간 우리가 이룬 성취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현 상태에 주저앉는다면 여전히 강대국의 흥정 과정의 객체로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강대국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적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던 100년 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 현실을 보면 국제적 위기상황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권 쟁탈전으로 꽉 차 있어 그 위기가 겹으로 다가오는 듯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 한국에서의 ‘진보’와 ‘보수’

한국의 현대 정치문제를 다루는 대중적 언론매체를 보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는 정치사회학적 문제들이 큰 주저 없이 사용되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필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지만 논의의 연속성을 위해 일단은 같은 방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 전체에 걸쳐 대부분의 정치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대결 구도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의 사용은 일면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사회의 성장 배경과 방식이 다른 관계로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보수 또는 기득권 세력과 그에 대항하는 세력의 성격, 그리고 그 대결의 양상도 나라 또는 사회마다 자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는 일반적 문제들을 사용

한다면 현재 우리의 독특한 문제에 대한 고유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 그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분석들을 보면 객관적 설명보다는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수사술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말할 때 일반적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기득권과 관련해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는 사회계층간의 대립을 말한다. 그러나 현실정치 속에서 투표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보수와 진보의 정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보수라는 말의 짝으로 사용되는 진보라는 말은 도덕적/정치적인 문제에 관해서 보다 개방적이고 탈권위/탈억압을 지향하며 사회적 이익/권력 배분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수평적인 관계의 도입을 주장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말의 표면적인 뜻만으로 본다면 개방과 탈권위주의를 지향하는 진보가 보수보다 더 큰 도덕적 우월성을 갖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보수는 항상 방어적 자세를 취해야만 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보수라고 해서 개방과 탈권위/탈억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의 무조건적 수호에만 관심을 쏟는 것도 아니다. 보수의 입장에서 지키고자 하는 기성의 도덕적 태도와 권력/이익 배분관계가 단순히 기성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판되거나 수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점은 기성의 이익/도덕관이 갖는 정당성(윤리적 타당성) 여부 또는 정도와 그것들이 갖는 보편적 호소력의 정도 또는 그 최소한의 존재 여부의 문제이다. 이러한 보편성을 기준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자신들을 단순한 기득권 수호 세력으로 규정되는 수구와 애써 구별하고자 한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에 관련된 수많은 이론적 논의들은 대부분 원론적 논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상적인 개념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장의 현실성과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론(空論)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공론(公論)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적 지위를 획득한 많은 이론적 논의들은 표면적 추상성에

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대결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절실한 의미에서 현실정치적인 것이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 운영을 위한 기본 가치와 원리,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헌법과 각종 법률이 제정되었다. 모든 헌법적 원리는 그러한 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수립된다. 그리고 모든 변화와 진보의 요구는 그 요구를 관철시키는 사회적 방식에 관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기본적 합의·규칙의 준수가 전제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변화를 조급하게 여기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든 복잡한 사회적 규칙은 변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보수적이거나 반동적이라고까지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화의 요구만이 오로지 도덕적 타당성이나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라는 문제들이 공개적으로 채택되면서 정치문제가 토의된 역사는 대단히 짧다. 한국에서 이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쟁이 처음 시작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었다. 일본 식민통치가 패전과 함께 갑자기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질서가 수립되는 것을 계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정치이념들이 이른바 해방정국 속에서 제출되었다. 이 해방의 정치 공간 즉 아직 공식적인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5~48년의 3년간 시기에 경험한 엄청난 혼란 상태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수와 진보 논쟁의 시발점이었다.

그런데 이 점과 관련하여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러한 논쟁의 실제 전개과정의 이면에는 당시 갓 시작된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대결 양상이 이미 깊숙이 침투해 있었다는 점이다.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배제할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닌 이상 이러한 현상, 즉 국내정치 문제가 국제적 세력관계에 의해 굴곡되는 현상은 사실 불가피하고 일반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념 투쟁에 나선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의식하지 못했거나 의식적으로 애써 외면했다. 소련의 세계정책의 틀 속에서 구체적 방향성이 정해진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사실상 무제한적인 자

유가 보장된 해방 공간의 토론 환경 속에서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정치이념으로 제시되었고 동시에 북한 지역에서는 국가건설 작업의 이념적 기반 및 프로그램으로 활용되었다.

소련의 이러한 정치적 기도를 뒤늦게 파악한 미국과 미국의 지원 하에 남한 내에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공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러한 입장을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으로 포장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정치 상황 속에서 보수와 진보의 논쟁은 처음부터 자유롭게 허용될 수 없었다. 금지된 것은 단순히 이념 논쟁뿐이 아니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노동자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거의 모든 문제제기는 ‘용공’의 혐의 때문에, 또 그것을 구실로 억압되었다. 또한 미군의 역할에 관한 일체의 논의도 역시 ‘용공’이라는 점에서 금지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부의 정책, 특히 사회적 쟁점과 관련한 정책을 비판하는 모든 논의나 문제제기가 ‘용공’이란 관점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반공’이 전가의 보도가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든 비판적 논의는 음성화하거나 급진화될 수밖에 없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우익’적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적지 않은 수의 인사들이 유신 정권 때에는 ‘급진적’ 인물로서 처벌되거나 도피생활을 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의 인물들이 현재는 ‘진보’ 진영의 인사들로부터 ‘보수적’ 또는 ‘극우적’ 인물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한 일로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뀐 것은 그러한 인사들의 태도라기보다는 그러한 비판 논객들이 처한 정치적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 논쟁이 본격적으로 즉 그 본래대로의 모습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었다. 유신 정권을 뒤이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정부의 권위주의적 위압만으로는 더 이상의 사회적 통제가 어렵게 된 1980년대 중반 이후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비판운동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금지되어온 모든 ‘급진’ 이데올로

기들의 온상이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고도의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이 급진적 이데올로기의 해방을 가져왔다. 이로써 1945~48년 이후 처음으로 또 다른 ‘해방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거 ‘진보’라는 말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금기어’였던 것과 유사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으로 (서양식 표현을 빌리면 ‘미러[거울] 이미지’로) 나타나 ‘보수’라는 단어는 정치적으로 기피되는 일종의 낙인 비슷한 말이 되었다. 학자, 예술가, 종교인, 언론인, 그리고 정치인까지 포함해 ‘보수’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꼬리표로 되었다. ‘진보’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가치인 반면 ‘보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잘못 여겨지게 되었다.

## 교조주의와 원리주의: 한국의 지적 풍토

사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히 바뀌었다. 한때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가치로서 여겨지던 보수의 주장이 이제는 떳떳한 정치적 입장으로서는 자유롭게 제출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변한 것은 앞서 잠시 언급한 과거 유신정권 하에서 ‘급진적’ 인물로서 추적되던 인물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획득한 ‘도덕적 권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보수의 입장을 제시한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는 이른바 진보정권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진보정치 10년의 경험을 통해 진보정치가 갖는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다. 국방안보와 관련해 북한 정권에 대해 강경한 자세 대신에 우호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른바 ‘진보적’ 대북정책인 것처럼 주장되었으나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일관된 공격적 태도로 인해 그러한 우호적 정책이 남북관계의 ‘진보적’ 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점차 커졌다. 다음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정책의 확장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진보’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흥미로운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



다.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나 의사가 자유롭게 제시/토론 되기보다는 정치권력이든 또는 여론의 힘이든 이성적 토론을 넘는 폭력적 방식으로 어떤 특정 입장을 강변하거나 매도/억압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한 적합한 설명을 제시하는 일이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작업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이 점을 무시한다면 어떤 좋은 생각이나 의견도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필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즉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가 그 자체대로, 즉 보편성 또는 절대선으로의 위선적 위장 없이 자유롭게 그리고 솔직하게 주장될 수 있는 다원주의적 지적 환경 또는 전통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모든 중요한 정치/사회 이념들이 드러내는 보편적 외양의 바닥에는 특수한 이해관계의 주장이 깔려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그리고 반대로 특수한 이해관계도 나름대로 일정한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선일 뿐이다.

이러한 지적 환경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특수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편성을 갖는 정치적 이론/주장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이념들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논쟁을 벌였던 경험이 없다는 불행한 전통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통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배적 정치 이념은 우리 자신이 부딪혔던 고유한 정치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려는 토착적 노력의 직접적 결과물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치이념들은 전부 기성 이념으로 수입된 것이었다. 그 기성 이념도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새로이 수립된 정치권력 질서에 대한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채택-도입되었기 때문에 정치사상의 자유로운 수립과 토론에 필요한 지적 자유와 독립은 처음부터 억압되었다. 또한 대안적 이론이나 세력도 부재했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주요 정치사상들은 출발부터 관제 이데올로기였던 것이다.

성리학이 중국으로부터, 사회주의/공산주의는 소련으로부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미국에서 기성품으로 도입되었다. 이 기성품은 생산된 본고장에서는 전부 상당한(정치적-이론적) 토론 및 투쟁 끝에 완성된 이데올로기였다. 정치사상이나 이념이 직접 생산된 본고장에서는 논쟁에서 패배한 대항 이념들은 완전히 척결된 것이 아니라 소수 의견으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 용인되었다. 승리한 정치이념을 기성품으로 수입한 고장에서 대항 이념들은 도덕적 또는 정치적 최악이었고(사문난적=斯文亂賊) 따라서 원천적으로 억압되었다. 이념의 구체적 내용과는 무관하게 반대 이념에 대한 관용이 전혀 인정되지 않은 교조주의가 기본적인 사상의 전파 형태였다. 이 점은 정치이념에 국한되지 않고, 정도에서 차이는 있었지만, 종교, 미술, 음악 등 모든 종류의 관념적 활동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현상처럼 보인다.

이렇게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 독특한 사상 풍토는 이념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한 정치문화의 기본꼴로 되어 저항 이데올로기도 비슷한 패턴을 취하게 되었다. 즉 조그마한 이단이나 흠결도 인정하지 않는 원리주의(fundamentalism)나 순교자 정신이 그것이다. 자신과의 일체의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순정주의(純正主義)적 태도는 정치적으로 말하면 완고한 권위주의적 독재에 해당된다. 이 두 가지의 태도는 억압자와 피억압자라는 차이는 있지만 거울 이미지를 이루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흥미롭다.

##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성격

현재의 우리의 상황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자.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라는 포괄적 이름으로 불리는 다양한 지배계급 세력의 정치사회학적 이해관계와 세계관/가치관을 반영하는 이념적 입장이다. 그러나 이 이념이 단순히 계급적 이익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보편주의적 철학과 법치의 사상을 내세웠고 또한 실천에 옮겼

기 때문에 협소한 계급기반을 넘어서는 보편적 적용과 호소력이 가능했었다. 서양 자유주의가 계급적 이데올로기였다는 지속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는 보편적 호소력 때문에 아직도 지배적 정치이념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대항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가 개인주의의 대안으로 내세웠던 공동체의 사상이 현실적으로 국가 관료기구의 역할 증대와 개인 자유 영역의 억압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람직한 주장을 품는 사회주의는 그 일부의 사상이 자유민주주의에 수용되면서도 그것을 대체하는 사상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는 서양에서와 같은 정치사회학적 조건 위에서 수립된 정치이념은 아니다. 서양에서 이 정치이념은 근대 초 강력한 국가건설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국가기구의 자의적·억압적 통치행위에 대한 지배적 사회세력들의 저항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국가권력에 대한 규제가 중심 쟁점이 되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위에 대한 주장이 철학적으로 제기되었고 권력을 규제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법치가 제시되었으며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시민혁명이 발생되었다. 정치논객 루소에 의해 고무된 혁명은 칸트와 헤겔에 의해 철학적으로 추인·봉인되면서 자유주의의 기반은 더욱 공고해졌다.

한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의 도입은 국내정치적 토론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국제정치적 사태 전개과정에서의 상황논리에 의거한 바가 더욱 크다. 노동자/농민의 해방이라는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북한 지역에서 국가건설 작업에 선수를 친 소련과 북한에 맞서, 단독정부의 수립으로 분단의 영구화를 시도한다는 어찌 보면 불공평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남한에서의 국가건설 작업이 미국의 지원 하에 시작되었다. 남한의 정치현실이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북한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표방은 불가피했었다. 덕분에 본고장에서는 수세기에 걸쳐 수립된 모든 사람들의 참정권이 보장되는 보편선거제는 단 몇 년 만에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념의 현실적 작동이 제대로 이해되거나 이루어

질 수 없었고 또 그리 되지도 않았음은 자명한 일이다.

3년간의 해방정국을 넘어서 간신히 권력조직 수립을 달성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념적으로나 군사와 경제면에서의 실질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약체 정부였다. 따라서 강력한 군사력과 남한 내 협조세력의 이념 투쟁을 통해 쉽게 전복시킬 수 있다고 본 북한 정권의 전략적 판단은 그렇게 틀렸던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은 그러한 판단 위에서 발발했다. 그런데 바로 그 덕분에 남한 내에 보다 강력한 반공국가가 큰 저항 없이 수립될 수 있었다는 점은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의 실수였다. 북한의 실패를 단순히 미국의 정책과만 연결시켜 설명할 수는 없다. 민간생활 부문에서는 상당한 자율성과 사유재산을 용인하던 전통적 정치문화를 배경한 전체주의적 동원정치에 다수의 한국인들이 큰 혐오감을 가졌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전쟁의 결과, 실행과정에서는 반공의 뜻을 빼다면 그리 큰 의미는 없는 것이지만 여하튼 최고의 정치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확고부동한 기반을 마련했다.

반공의 필요성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강력히 선언되고 주입된 자유민주주의였지만 실상은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정치이념으로 정치 현실이 아니라 관념적인 정치 이상이였다. 정부의 관행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전통적인 권위주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개인의 자유나 각종 시민적 권리는 개념으로서만 존재했고 선거는 부정으로 행해졌으며 법치는 무법과 불법을 법의 범주에 넣을 때 비로소 설명될 수 있는 현실이였다. 이러한 일이 상당 기간 존속했던 것은 그것이 전통적인 정치 문화와 관행에 더 가까웠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민주주의가 교과서적 이상이었던 데 비해 그러한 구시대적 관행이 더 익숙한 것이였다. 그러나 오로지 관념으로서만 존재하던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의 붕괴를 이끌어내고 현실로 될 수 있었던 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부심을 부여하기도 한다.

## 권위주의 정권에 안주한 신중산층

5·16 쿠데타로 성립된 군사정부는 결핍된 민주적 가치를 상쇄할 수 있는 현실적 업적의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고 경제발전/성장과 군사적 안보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들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이 경제발전의 노력의 직접적 수혜자로서 한국사회 내에 새로운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었다. 서양의 민주주의의 주도 계층인 부르주아지와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던 이 현대 한국의 신중산층은 사실 경제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강력한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존재였다. 실제 권위주의 정권의 주요 정책결정자와 실무진도 대부분 이 계층 출신이었거나 아닌 경우에도 일단 충원되면 이 계층의 일원으로 규정되었다. 하지만 이들 세력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권위주의 정부 정책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자기모순성에 어색해 하면서도 서양식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았다.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일관되게 추진된 경제성장 정책의 덕으로 성장하고 한국사회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신흥 중산층은 유신 정부 이후로도 전두환 정부를 이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의 중심적 지지기반이 되어왔다. 물론 이와 함께 한국적 특수 상황으로 지역주의 또는 지역감정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1970년대부터 김영삼 정부의 출범 때까지 영남 지역은 항구적 여당 지지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 점을 언급하는 이유는 국가의 보호 하에 성장한 신흥 중산층과 영호남 대결이라는 독특한 지역정치의 구도가 이른바 한국 보수주의의 정치를 구성하는 양대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한국의 신흥 중산층의 형성과 성장은 1990년대 중반에 와서 크게 자부하기 시작한 ‘광복 50년’의 성취의 기본 내용을 이룬다. 근대화와 발전의 문제는 1950년대 이후 미소 대립의 과정에서 형성된 20세기 세계정치의 중심 신화 또는 희망사항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1990년대 중반까지

성공적 근대화를 이루어 그 신화를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사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일한 경우였다. 그러한 국제적 성공담은 단순히 경제성장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를 동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자부심은 정말로 대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자부심은 국가에 의한 통제로도 막을 수 없는 중산 시민층의 자만심으로 이어졌고 그 자만의 결과로 1997년의 위기가 초래했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1997년 위기의 정치사적 의의

1997년의 위기는 한국정치사와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면서 야당으로만 남아있던 민주당이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었다. 한국의 보수층은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군부 정권 하에서 이룬 경제발전의 직접적 수혜층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그동안 싫든 좋든 권위주의 정부의 정당성의 확보 작업의 전위조직으로 만들어진 여당을 계속 지지해왔고 또한 이 여당이 제공하는 정치적 리더십의 보호막 내에 안주해왔었다. 그러나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해 한국 신중산층도 양적으로 성장하여 자체 내에 다양한 이질적 요소를 품게 되었다.

우선 언급해야 할 점으로는 1997년 위기를 통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신중산층 인사들이 정부에 대해 느끼게 된 강한 불신감과 불안감이 있다. 이 위기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중산층과 정부-여당 사이의 일체감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 다음으로 새로운 연령층 인구의 정치세계로의 유입을 말할 수 있다. 분단, 전쟁 및 저발전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는 비록 이들이 신중산층 출신인 경우에도 부모 세대와 같이 자동적으로 정부-여당과 일체감을 갖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대학생 시절에 익힌 반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덕분에 새로운 세대는 여당을 지지하는 일에 상당한 어색함이

나 불편한 기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고 심한 경우에는 엄청난 도덕적 자괴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1960년대의 민주공화당을 시작으로 1980년대의 민정당, 1990년대의 민자당, 2000년대의 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여당은 전통적으로 신중산층=보수층과 영남지역을 중심적 지지기반으로 삼아오면서 특별한 노력 없이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독과점체제의 이점을 누려왔었다. 그러나 1997년 후 급변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될 수 없다는 점은 199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 확실해졌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 환경이 훨씬 더 자유시장 체제 쪽으로 다가 갔다는 점을 절감하였다.

## 정체성 확립의 실패

어쨌든 한나라당은 2002년의 정권탈환 작업에도 실패했다. 2007년에는 정권이 10년 만에 한나라당에 탈환되었지만 한나라당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대북 정책,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경사된 이념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열린우리당 정부의 실책에 대한 반감이 더 크게 작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정치도 게임인 이상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남이 더 못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일깨워주는 좋은 사례인 듯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수립은 이명박 후보의 개인적 인기나 그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상대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나 불안/불신감이 더 크게 작용했던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탄생도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두 정부 모두 비록 정권을 탈환/유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대중적 신망을 얻는 데는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 초기 광우병 괴담과 관련된 '촛불 사태'와 이에 대한 '백기투항'과 같은 대통령의 발언 등을 통해 얻어진 인상이다. 이러한 점은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다. 최근

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쏟아진 정부에 대한 불만사항들, 세월호 사건, 고고도미사일방어망(THAAD) 설치문제, 국정교과서 사태 등을 볼 때 다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집권한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도덕적 권위를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 안쓰러울 뿐이다.

사실 이러한 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이나 그들을 보좌한 정권 실무자들에게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당시로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개인들의 수준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또는 정권의 보호 하에 성장해온 한국의 보수층 또는 신중산층의 실패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보수층은 한국사회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지만 사실은 권위주의 정권의 보호 속에 안주해왔다. 언젠가는 그러한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질 것에 대비한 준비가 없었다. 언젠가는 홀로 설 것에 대비해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입지를 정당화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무를 수행할 준비 작업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히는 그러한 작업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무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그람시를 인용해 말한다면 계급적 '헤게모니'의 존재나 역할에 대해 전혀 무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의 보수층은 조선시대의 양반층에 비해서도 한참 뒤떨어진다. 조선시대의 양반층은 지배세력으로서의 강력한 자의식을 바탕으로 비록 중국에서 도입하기는 했지만 성리학을 자신에 맞게 고쳤고 이것을 근거로 구체적인 통치/행정 원칙을 만들고 필요한 경우 개혁의 이론도 생산해냈다. 그 점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영광의 50년 동안 만들어낸 문화적 업적은 그저 「국민교육헌장」과 유신 헌법 정도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동안 경제적 수준에서 이루어낸 물질적 성취에 비해 너무 초라한 이 문화적 성취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증거물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의 주도층인 신중산층의 역사적 일천성(日淺性)을 고려한다면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현대 한국정치 주도층의 무지와 무능이 정당화되거나 그로 인해 만들어진 여러 가지 난관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화적 열악성의 가장 결정적 증거는 지난 60년을 전후해서 일군 우리의 성과와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하는 확실한 정체성과 관련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동요 또는 자신감 결핍을 말해주는 단적인 예로는 중고등학생용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을 들 수 있다. 자신이 고생해 수립한 정치-사회체제의 현실을 전체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정체성의 출발점으로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없다면 과연 주도층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정체성 문제는 단순한 관념적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지향해야 할 중심 가치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기본 가치 문제와 관련된 철학적 입장이 확실히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가치의 기준은 여전히 과도적인 물질적 가치에 의해, 가장 상징적인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평수로, 대표되고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권위 있게 규제할 수 있는, 물질적 가치를 넘는 윤리적 원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행위는 방법의 윤리성을 따지지 않고 사실상 모두 허용되는 형국에 이르렀다. 도덕에 의해 미리 걸러지지 않는 수많은 비윤리적 행동들을 법 하나만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법의 도덕적 권위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불법 행동이 적발되어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로 여겨질 뿐이다. 한때 농담처럼 회자되던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죄는 재수없는 죄이다"라는 자조적 말은 바로 그러한 사정을 잘 말해준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기본적으로는 현대 한국사회의 주도층인 신중산층=보수층의 문제다. 그런데 앞서 다른 문제들과 관련해 지적했듯이 이 보수층에 대한 (이른바 진보 진영의) 비판적 논의들도 보수층의 한계를 거울 이미지처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정체성 확립 문제와 관련하여 주도층인 신중산층 또는 이들을 대변하는 지식인들이 실패했다

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비판 이론가들의 역할은 그러한 실패를 항구적인 것으로 만드는, 즉 다투고 있는 듯하지만 실은 서로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한 보완적 역할이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버릴 수 없게 한다.

사회적 정체성의 수립은 싫든 좋은 현실적으로 주어진 '나' 또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출발점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비판적/대안적 논의들은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을 유토피아에 두고 있는 원리주의적 주장으로 일관한다. 어차피 유토피아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거나 가질 수도 없는 완벽한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상상된 공중누각이 아닌가. 현실 비판이 아니라 현실 부정 즉 자기기만 행위이다. 비판은 있지만 대안은 없다. 안주해온 현실을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현실로서 주장할 자신이 없는 보수층이나 비판의 기준을 초현실에서 찾고자 하는 진보층은 정반대의 입장이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정치 지도력 양성 작업의 부재

현대 한국의 주도층이 자신이 주도하는 현실 정치체제의 도덕적 지위 확립, 즉 확고한 정체성 확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의 가장 뼈아픈 결과는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지도력을 양성할 체계적 작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이 점은 주도세력이 지배계층으로서 특권 추구에는 민감하면서도 그에 상응한 책임의식은 약했던, 즉 주인의식을 갖지 못했던 점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도력 양성 작업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교육은 '홍익인간' 같은 두루뭉술한 목적 설정 외에 명확한 이념을 설정하지 못한 채 전적으로 개인 수준의 취업에 맞추어져 실행되었다. 35년간의 식민지 통치와 3년간의 전화(戰禍)를 겪으면서 생산기반과 문화기반이 사실상 거의 다 파괴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점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 주인의식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사치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른다. 보수층은 권위주의 정부의 보호 하에 안주해온 피보호자였기 때문

에 사실은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의식도 별로 갖지 못했던 것이었다. ‘지도력 양성의 필요’라는 문제의식 자체가 생기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식민 통치기간에 상실했던 것은 국권으로 그치지 않고 주체의식 자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회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라면 정당이 지도자 양성의 중심지가 되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한국의 경우 의회정치도 없었고 간판뿐인 정당은 주인 따라 바뀌는 이름 때문에 그때마다 간판 바뀌는 일에만 몰두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권위주의 정부와 맞서 싸운 야당은 지속적인 탄압과 맞서 싸우고 그 예봉을 피하는 작업의 와중에서 강력한 지도력이 길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등장한 김영삼-김대중 두 야당 지도자들이 권위주의 정권이 퇴조한 후 정치 지도자로서 대두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민주투사’로서 ‘투쟁’을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생긴 권위는 한국의 독특한 정치풍토와 결합해 군부정권의 거울 이미지의 성격을 갖는 또 다른 권위주의 문화를 낳는 데 일조했다. 이들 덕분에 민주화 달성의 시간을 줄일 수 있었지만 이들 밑에서 성장한 지도자 집단을 보면 상당수가 투사형 내지 대중영합적 선동가 형의 인물들이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듯 보인다. 최근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언급되는 야당 지도자가 ‘패권주의’라는 점에서 비판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인 것이다.

민주화 시대는 권위주의 시대와는 전혀 다른 도전을 지도자들에게 제시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1997년 이후 한국의 정치환경은 급격히 자유시장적 상황으로 바뀌었다. 공직을 원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과거에는 공천권을 갖는 군부 정치인들의 환심을 사야 했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 어쩌면 민주화 시대의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희망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권자들의 희망사항이 하나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고 또한 정치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이기적 요구일 경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

런 점을 고려한다면 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주인이 권위주의 시대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운 주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비유적으로 말해 관현악단의 지휘자는 악단원들의 연주에 맞추어 춤추는 사람이 아니다. 지휘자는 지휘봉의 움직임을 통해 자신이 요구하는 바대로 음악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대중영합주의(포폴리즘)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과연 ‘국민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전적 논쟁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분한 교과서적 원론이라고 비판 받을지 모르겠지만 왜 루소가 ‘일반의지’와 ‘전체의지’의 구별을 애써 강조했는지 조금 이해할 만하다.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대중영합적 공약은 사실상 선거후 안 지켜진다면 훨씬 더 고마울 것이다. 과연 그러한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어리석은 일들을 유권자의 수준에서 걸러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 맺는말: 인기투표식 지도자 선출 방식의 대안은 없을까

유능한 지도자의 양성과 선발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본고장이라 할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회주의 전통이 잘 확립되어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 대로 선거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고 여러 가지 위기와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그나마도 최근에 와서는 통제가 사실상 어려운 SNS 같은 분권형 미디어의 범람으로 전에는 없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양과는 전혀 다른 정치 문화 때문에 서양식 제도가 원래 의미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유사한 정치 전통을 갖는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볼 때 효과적인 정치 지도력의 양성 및 선발과 관련하여 인기투표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방식

이 채택되어 운용되고 있다. 지금에 와서 일본이나 중국의 것을 본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서양의 경우들과 함께 그러한 예들을 좀 더 상세히 탐구해 봄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보다 유능한 리더십의 양성과 선발 방식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할 잠재 사항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다른 곳에서 어떤 제도가 운영되고 있든 그에 관계없이 우리 자신의 고유한 문화나 제도 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나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고 그 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 작업 때문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창조적 지도력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의 독특한 정치 문화나 제도는 그러한 지도력의 출현을 막고 있다. 앞에서 필자가 행한 긴 논의는 왜 유능한 지도력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한가에 관한 것이었다. 창조적 지도력 산출의 필요성에 관한 필자의 희망은 사실상 공염불로 돌아갈 가능성이 너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정말로 분명한 점이 있다면 이 지도력 부재/결핍의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은 결코 극복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 전부가 구조적 요인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 구조의 허파는 미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전망을 갖고 여론의 압력을 극복하고 나라 전체를 이끌어 나갈 구체적 리더십의 실천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의 현실적 결과는 당장에는 그러한 작업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주장은 아니다.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는 창조적 지도력 부재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수정 없이는 한국의 국가적 발전은 일정한 한계에 머무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변의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계속해 약소국으로만 머물러왔던 과거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점 외에 어떤 다른 전망도 보이지 않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 박상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교(Southern Illinois University Carbondal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현재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최근 저서로는 『1차 세계 대전의 기원』(2014), 『국가 전쟁 한국』(2012), 『국가 주권』(2008), 『국가와 폭력: 마키아벨리 정치 사상 연구』(2002)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군주론』(2008) 등이 있다.

원고의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원고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지식의지평 22

知平 2017

발행인 | 대우재단

편집인 | 김광억

편집위원 | 김병연, 김승환, 김혜숙, 노정혜, 이태수, 주경철, 한준, 김용준, 김두철

편집주간 | 박은진

발행일 | 2017년 5월 8일

☞ 『지식의지평』은 대우재단이 국내 학문의 발전과 소통을 위해 발간합니다.

☞ 게재된 내용은 대우재단 및 편집진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